

새로운 韓國史像과 教材 開發

—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③ —

安 秉 佑

(韓神大 國史學科)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1. 學問의 主體性 확립과 土着化의 과제
2. 새로운 政治學을 위한 모색
3. 새로운 韓國史像과 敎材 開發
4. 社會學
5. 哲學
6. 女性學

1. 韓國史 敎育과 올바른 歷史意識

과연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 한국사 교육은 필요한가? 만약 필요하다면, 한국사 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한국사 대체 교과서를 논의하는 바탕으로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대학의 한국사 과목이 교양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중등학교 교과과정 개편에서 한국사의 필수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데서 보듯이 한국사 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다. 하나는 한국사는 이미 中等學校 과정에서 배운 것인데 대학에서 새삼 더 배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가 교양과목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사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많이 공부한 것이므로 비록 수준은 다르더라도 다시 교양으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는 대학의 교양교육 담당자들에게 만연되어 있다. 이 견해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 전제, 곧 중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육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점과 대학의 한국사 교육이 중등학교의 그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등학교의 한국사 교육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학의 한국사 교육은 중등학교의 그것을 단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대개 그러한 방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타당성이 없다.

한국사가 교양과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

는 견해는 교양교육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나온 것이어서, 역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교양교육의 목표는 흔히 ‘全人的 인격 형성’ 이나 ‘전공을 위한 준비능력 배양’으로 설정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토대를 이루는 자연과 사회, 역사와 현실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교양교육은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를 바탕으로 自主·民主·統一을 지향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그 목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현실을 개혁하는 새로운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는 이러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의 내용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자주교육이 자기 나라의 문화전통과 언어 및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자존과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학문 분야가 한국학 관련 과목이며, 체계적인 한국사 교육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사 교육은 우리 역사의 전개 속에서 사회민주화의 역사적 당위성과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한국사는 그동안 제대로 교육되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政治的 측면이다. 한국사는 國學 과목으로서 국민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때문에 왕왕 이데올로기 과목으로 이용되었다. 중등학교에서 한국사를 國定教科書로 교육한다든가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필수로 지정하였다가 해제한 것, 최근 중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으로 돌리려 한 것 등이 모두 그러하다. 1976년의 교양한국사의 필수과목 지정은 대학에서 한국사가 마땅히 차지하여야 할 입지를 國策科目이라는 汚名을 씌워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는 하였으나, 본래 유신정권의 이데올로기로서 國粹主義 이념을 창출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사 교육은 정권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올바른 歷史意識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뀐 것도 이러한 한국사 교육의 성과를 反體制 意識化의 한 현상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하나는 韓國史學界의 경향과 관련된 측면이다. 敎材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과서의 형태로 압축되는 敎育內容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곧 한국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한국사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사 교육은 한국사 연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새로운 연구 없이 새로운 교육은 있을 수 없고, 새로운 교과서도 집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사 교육내용은 한국사 연구의 경향과 성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는 여타의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학문적 전통이 깊고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韓國史學은 기본적으로 민족과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왔다. 日帝가 이른바 植民史學을 통해 한국사를 왜곡하고 한국사 교육을 말살하던 시기에, 이에 대항하여 反帝 反封建 民族解放을 목표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한 民族主義 史學과 마르크스주의 史學은 反植民主義 史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담당하였다. 해방공간에서도 자주적인 민족 통일 국가 수립을 목표로 마르크스주의 사학과 新民族主義 史學이 활동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민족주의 사학의 계승과 재건을 주장하며 우리 민족 스스로 역사를 발전시켜 온 과정을 추구하는 內在的 發展論을 성립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韓國史學 모두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와 교육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으며, 실천적인 차원에도 한계가 있었다. 일제 시기의 文獻考證 史學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亞流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도 이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단연된 신제국주의 역사관에 대한 인식도 철

지하지 못하였고, 분단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新植民地性·反民衆性·反民主性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80년대 이후였다. 주지하듯이 '80년대에 들어 민중세력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전면에서 등장하고, 미국을 비롯한 外勢를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민족 민주운동이 질적으로 비약하였다. 그리하여 민중이 변혁주체로 나서 외세를 배격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사회민주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현단계의 과제가 집약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학계에서도 민중과 분단현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구체화하여 民衆論과 分斷史學論이 제기되었으며, 민중을 주체로 한 새로운 한국사 인식의 방법론과 이론이 주창되었다. 한국사 연구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한국사 교육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요청되었다. 대체 교재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역사 연구에는 현실의 과제 해결에 충실하려는 경향과 현실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함께 존재하였다. 전자가 역사학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이를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의 경향은 대학에서 교양한국사를 國策科目으로 묶어 필수로 지정하였다가 다시 해제한 과정이나 최근 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한국사를 필수에서 해제하려 한 시도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관변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거나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주도하였다.

2. 代替教材 開發의 必要性과 編纂基準

이른바 國策科目이라는 이름으로 교양한국사를 대학에서 필수로 부과함에 따라 교재의 수요가 폭증하였다. 교양한국사 교재는 대체로 두 종류가 사용되어 왔다. 하나는 기왕의 通史를 이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전자의 예로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李基白 교수의 『韓國史新論』과 韓祐勛 교수의 『韓國通史』, 그리고 邊太燮 교수의 『韓國史通論』이다. 이들 통사는 자기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체로

관점이 분명하지 않거나 근현대 부분을 소략하게 다루었다. 또한 각 시대를 사회구성의 특성에 따라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그 변화과정을 체계있게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으며, 지배층 위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책으로서는 바람직한 한국사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각 대학에서 개발한 교과서는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論斷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전자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대학의 교양한국사 교수 실례와 교과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재는 王朝別 編年式과 支配勢力의 變遷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 위주의 서술 형태가 지배적이다. 심지어는 출판사가 '국사교재편찬회', '한국사연구실' 같은 가공의 조직을 만들어 교재를 남발하고, 출판사가 펴낸 책에 자기 이름만 넣어 교재로 사용하는 교수도 있었다. 한국사 교재가 새로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의一端이 여기에도 있다.

이러한 교재로는 한국사 교육의 목표, 더 나아가서는 역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역사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歷史意識을 길러주는 데 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은 意識化의 과정이다. 의식화란 客體로 존재해 온 인간이 主體라는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인간이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지식의 단순한 전수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비판적 의식의 형성을 통하여 '政治的 文盲'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

한국사 교육의 目標은 자기를 망각하고 살아온, 자기 인식을 말살당해 온 이 민족이 먼저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기를 주체로 삼는 이념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 즉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 과제인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 교육의 실천적 의의는 이러한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 자주, 조국통일에 복무하는 데 있다. 교양한국사 교육도 역사교육, 한국사 교육의 일부분이므로 그 일반적 목표에 충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 교

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찬되어야 한다.

한국사 교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한국사의 발전과정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시대별 특성이 잘 드러나고, 그 동질성과 차별성이 명확히 부각되어야 하며,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옮겨가는 移行의 契機와 主體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역사는 변화·발전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 해석과 평가는 현실적 판단에 입각한 의미 부여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특히 ‘현실과 관련시켜’ 한국사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교양한국사 교육이 우리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국사학은 과거의 사실을 다루는 前時代의 학문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학문이므로, 현실의 과제 해결에 충실하려는 관점을 堅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시대를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교양한국사를 수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근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근현대사는 마땅히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이해단으로는 올바른 한국사 인식을 갖기 어렵다. 실제로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가운데에도 在野 史學者들의 고대사 인식이 마치 민족주의 사학의 精髓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팽배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균형있게 편찬하면 강사의 전공분야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역사인식과 역사학의 발달을 다룬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인식과 역사관은 무엇이며, 우리나

라 근대 역사학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 발달해 왔는가” 하는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歷史家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며, 그로 인해 역사학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진실한 역사학이란 當代의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3. 새로운 教材의 開發 現況

’80년대의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생산활동과 민족의 주체인 민중에 대한 관심은 지배층 중심의 역사가 아닌 민중 중심의 역사연구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요구는 폭발적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한국사 개설서들이 편찬되었다. 한국민중사 연구회에서 편찬한 『한국민중사 1, 2』(플빛, 1986)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서술함으로써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나, 제목에 부응할 정도의 내용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인의 저서로 姜萬吉 교수의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84), 박세길 씨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돌베개, 1988)가 발간되었고, 19세기 이후의 각 분야의 연구 현황을 정리한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근현대연구입문』(1988, 역사비평사)과 한길사의 『해방전 후사의 인식』 6책(1979~’89), 그리고 崔章集 교수가 編한 『한국현대사』와 같은 인접 분야의 연구 성과가 속속 출간되어 한국 근현대사 인식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 역시 進歩的 역사관을 내세웠지만, 그에 걸맞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한 분야에 치우쳐 사회구조와 그 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읽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대체로 대학의 교양한국사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학계에서 마련한 본격적인 代替 教材라고 할 만한 것으로는 한국역사연구회가 편찬한 『한국사강의』(1989년, 한울아카데미)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면에서 특징이 있다. 먼저 여러 명의 연구자가 일관된 지침에 따라 편찬 과정에 참여하여 공동 작업한 결과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두 12명의 필자가 공동 토론을 거쳐 서술의 원칙과 주제, 서술 내용을 확정하고, 작성된 원고는 다시 분과별로 발표와 토론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체제와 서술 원칙에서도 잘 드러난다. 체제면에서는 강의에 중점을 둔 강좌식 체제를 선택하고, 서술의 기초면에서는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근현대에는 민족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민족 민주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여 전체 16개의 장 가운데 9개를 근현대편에 할애하였고, 통일 지향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북한사와 남북한 통일 논의의 전개과정을 독립된 章으로 다루었다. 또한 체제의 균형상 本章에서 다루기 힘든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補說로 다루었다.

總論을 두어 서술의 입장을 명확히한 점도 특징의 하나이다. ‘韓國史 認識의 방법과 과제’라는 제목의 총론은 역사인식의 구조, 근현대 한국사 인식의 발달, 社會構成理論과 時代區分論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역사인식에 관한 부분에서는 역사란 역사가에 의해 재구성된 歷史像이며, 이러한 歷史像은 역사가의 역사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 그 때문에 역사가에 의해 재구성되는 역사는 사회현실에 뿌리를 둔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가지며, 진실한 歷史像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 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논리를 인간역사의 총체적 경험을 통해 구축해 내는 역사상이라고 하여 역사학의 現在性和 實踐性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韓國近現代史學史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사강의』의 입지를 마련하고 있다. 시대의 과제에 철저하였던 역사학과 그렇지 못한 역사학, 올바른 방법론을 구사하였던 역사학과 그렇지 못하였던 역사학을 냉엄하게 분석하여 『한국사강의』 출간의 당위성을 史學史的으로 명확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대구분의 의미와 그 기준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시대구분의 의미는 역사발전의 객관적 원리를 밝히고, 그 원리를 기초로 하여 그 발전의 최종적인 현실 사회의 존재구조와 단계적 성격을 해명하고 현실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갈 수 있는 변혁논리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社會構成體에 입각한 시대구분이 그러한 과제 해명에 매우 풍부한 논점을 마련한 가장 과학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사강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집필된 대체 교재였다. 그러므로 실로 그 영향력은 한국사학계에서나 인문 사회과학계에서나 지대하여 본격적인 대체교과서의 효시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강의』에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강의용 교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한계도 있었다.

한국사특강 편찬위원회 편 『한국사특강』(서울대출판부, 1990)도 강의용으로 편찬된 책이다. 이 책은 공동의 기획을 거쳐 주제를 설정하고, 여러 명이 집필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관점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출간되었다. 학계의 증진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소개한 점과 ‘1980년대에 在野史學과 民衆史學으로 兩極 分化된 두 목소리를 한 차원 높게 昇華하려 한’ 편찬의 태도는 이 책의 特長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제면에서 시대별 중요 주제와 문화사·사회경제사의 분야별 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집필한 점도 특색이다. 그러나 내용이 교양교재로서는 다소 어렵고, 각 부분의 내용의 심도에 차이가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공동연구의 성과물로는 구로역사연구소의 『바로보는 우리역사』(거름, 1990)도 있다. 支配階級の 역사를 비판하고 民衆 主體의 民族史를 체계화한다는 의식에서 연구원들의 공동연구의 성과로 발간된 이 책은 평이한 서술로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높은 문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분량의 제약으로 인해 설명을 단순화시킨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 책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한국사 교과서라기보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높아지는 현대사, 즉 해방 이후사에 대한 요구를 채워주는 일은 한국사학계가 당면한 과제였다. 그러나 현대사 전공자가 드문 형편에서 그러한 기대는 달성되기 어려웠다. 자연 정치학, 경제학 등 인접 사회과학분야의 업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현대사』 4책(풀빛, 1991)이 출간되었다. '90년대를 넘으면서 야기된 국내·외의 변화가 요구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와 요구에 응답하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간행된 이 책은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부의 공동 저작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를 다룬 이 책은 한국사 연구자들이 철예한 의식을 가지고 집필하였다는 점과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고 개설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치밀한 실증의 과정을 거친 구체적인 연구와 사회구조의 해명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체로 한국사 교재로는 通史類와 講義用으로 편찬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재는 모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강의를 위해 작성된 교재는 우선 체계면에서 한 학기용 교재로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한국사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기하기 어렵다. 章의 설정과 시대구분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시대별 사회구성의 차이가 부각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역사 발전에 대한 과학적·구조적·계기적 인식을 심어주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각 章의 집필자가 다른 데서 내용상의 괴리와 심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기존의 通史는 뚜렷한 역사관이 없이 사건과 제도를 나열하여 역사적 사건 상호간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간과하고 있거나, 진보적 역사관을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흥미 위주의 대중추수적인 이야기책 형식이어서 정확한 實證을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교재로는 『우리 역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科學的 認識을 제고하고 현재의 모순과 과제를 정확히 인식시키기 어려우며, 따라서 미래사회의 건설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80년대의 한국사 연구는 양적·질적

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한 결과를 새로운 차원에서 집대성하여 한국사 교육에 반영시키는 한편, 그 성과를 점검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청과 기존의 교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역사연구회는 통사로서 한국역사연구회 편 『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를 발간하였다.

『한국역사』의 집필에는 50여 명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여 최선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집필 과정에서는 개인의 연구 성과 위에서 수많은 토론을 거쳐 서술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草稿는 공동 작업의 성과에 나타나기 쉬운 '一貫性의 缺如'를 보완하기 위해 章과 章, 각 시대편의 연결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쳤다. 그 후 또다시 30여 명의 교열위원을 중심으로 교열과 윤문을 함으로써 관점과 서술의 통일을 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록 최근의 참신한 연구 성과라고 하더라도 아직 일 반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류하는 신중함을 견지하였다. 이렇게 철저한 공동연구의 과정을 밟은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성이다.

이 책의 체계와 목차는 社會構成의 질적 변화에 입각하여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사회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통용되던 세계사적 발전단계론을 고집하지 않고 다소의 탄력성을 유지하였음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대사회의 기점을 설정할 때 자본제사회 구성의 성립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의 편입과 식민지화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민족해방 운동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점이 또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역사』에서는 기존 통사에서 협소하게 다루어지던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강화하였다. 일제침략기 민족해방 운동의 여러 계열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상당한 분량으로 다루었고, 민족해방 운동을 운동만으로서가 아니라 운동이 이루어지던 사회경제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또한 현대사에도 4개 章을 배정하여 1990년대까지 다루었다.

그러나 이 책 또한 미흡한 점이 있다. 먼저 각 시대를 社會構成의 변화·발전의 입각하여 구분하려고 하였으면서도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점이 큰 한계가 될 것이다. 중세사회는 봉건사회로 분명히 규정하고 그 안에서 성립기, 발전기, 해체기를 세분하였지만, 고대의 경우 일반적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그치고 노예제사회로는 규정하지 않아 그 성격이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아직까지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데 기인하지만, 역시 한계로 남는다.

또한 文化史와 生活史, 그리고 對外關係史가 소홀히 취급된 점과 北韓史를 제외시킨 점도 한계가 될 것이다. 전자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없고, 대외관계가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서술한 까닭이다. 북한사의 경우, 북한 역사의 전개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남과 북을 하나의 시야에 넣어 다루기에는 아직 이르므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까지 차라리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신중함에서였지만,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4. 앞으로의 課題

시대가 변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과제가 달라지면 역사 서술과 교육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체 교재는 현단계에서 유용한 것일 따름이다. 때문에 한국사 교재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다시 개발되어야 한다. 이점이 歷史學에 내재한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한국사 교재는 오늘날의 사회모순의 실체를 분명히하고, 그 해결 방향을 올바르게 모색할 수 있는 歷史意識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사 연구 및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敎材, 하나의 通史로서는 교양한국사를 만족하게 가르칠 수 없다.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교양한국사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한국 역사와 시대구분, 한국사회사상사, 한국의 역사인식, 한국사회운동사, 사회변동과 역사의식, 한국현대사 등 다양한 교과목 명칭과 내용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도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일률적이던 한국사 교과목을 세분화하고 수준을 높인 강의들

이다. 따라서 이들 교과목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는 일이 차후의 과제로 되고 있다.

또한 기왕에 개발되어 있는 교재도 그 내용을 계속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견해 즉 역사관을 달리하는 교재가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견해에 입각한 교재의 제공은 學界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여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토론과 선택의 기회는 대학의 한국사 교육에 국한되지 말고, 중등학교의 한국사 교육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정교과서 제도가 폐지되고 자유롭게 교과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중등학교 과정에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대학의 한국사 교육이 중등학교 과정에서 잘못 형성된 역사의식을 바로잡는 데 더이상 허비되지 않게 하며, 나아가 한국사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써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는 統治 이데올로기로써 특정한 政策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의 開放化·國際化 추세를 빌미로 한국사 교육을 약화시키려는 기도가 있으나, 참다운 國際人은 자기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를 가져야만 양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결여된 국제인이라 참다운 국제인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제국주의의 저배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外勞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개방화·국제화를 구실로 한국사 교육을 약화시키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을 통해 분명히 보고 있다. 그것은 민족 自主의 상실, 外勞에의 從屬일 따름이다. 새로운 한국사 교재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고석규, “대학의 한국사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비평』, 1989년 봄호.
 邊太燮 외, 『1986년도 대학교양한국사 평가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승철, “대학에서의 교양한국사 교육”, 『역사와 현실』, 4호(1990년).
 안병우, “한국사 전공교육의 전개과정과 교과과정의 문제점”, 『역사와 현실』, 4호(1990).